

# 전북의 숙원, 하늘길 열린다

### 새만금 국제공항, 행정절차 완료... 건설 본격 돌입 공항·항만·철도 아우르는 물류 트라이포트 완성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일단대로 의결함으로써 전북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는 공항 건설에 앞선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음을 뜻함과 동시에 공항,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을 의미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는 이날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일단대로 의결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사전타당성 영역의 검증 단계이며, 검토 결과가 사전타당성 영역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기재부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공항 입지, 시설 규모, 총사업비, 예정공정, 항공 수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 등 도내 총 13개소를 장애물, 공역,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새만금 후보지(현 군산공항 활주로부터 서쪽으로 1.3km 이격된 위치)로 선정됐다.

공항부지 전체면적은 A=206.6만㎡이며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터미널(6018㎡) 및 화물터미널(549㎡), 계류장(4대), 제빙장(1대), 주차장(8,910㎡)등이며, 장애 확장을 고려해 여유부지 46.7만㎡를 포함하고 있으며, 취항지역으로는 풍곡, 일본 및 동남아 지역을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7,800억원으로 지난 8월에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과 비슷하고, 매립계획에 현황측량 결과치 적용 및 물가상승지수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2020~2021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 2024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을 위해 공사수행방식 결정 시 패스트 트랙(던기 등) 적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개항시기를 최대한(2년 정도) 앞당길 계획이다.

2000년 74만8882명, 2005년 84만4203명으로 예측되었으며, 장래 인구변화 및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와 2018년 군산공항 제2노선 점유율 등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용역 결과 시설규모 및 사업비는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사업비는 단기조정 등으로 약 110억원이 감소된 7800억원 규모로 예정되며, 입지 및 항공 수요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준용했다.

또한, 2020년 추진계획인 기본계획 수립비 40억도 확보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풀가동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 동부 지역, 동남아 등 다발인 중·단거리 국제항공 노선 개발 등 다른 인근 공항과는 차별화된 공항으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과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 선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투자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한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과 민간 투자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함께 한옥마을 등 관광역 유치, 농생명 산업과 연금 등을 특화한 금융 중심 도시로 성장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도민의 50년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격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나라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전북에도 이제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인 하늘길을 열기 위한 단초가 됐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8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공영입지, 시설규모, 총사업비, 예정공정, 항공수요 등을 담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뼈대가 완성됐다는데 의미를 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한바탕 한바탕 힘을 모은 우리지역의 정치인과 각급 기관·단체를 비롯한 모든 도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를 한층 가속화하고 새만금을 전북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킬 것이다"며 "글로벌 시대 새로운 국제항공수요에 대비한 항공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론 시숀릿 라오스 총리, 이웅산 수처 미얀마 국가고문, 뿌리웃 쩌-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북 베트남 총리, 프락 속훈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 文 대통령, 메콩 5개국 정상들과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 문화·관광·농촌개발·인프라·ICT 분야 등 협력키로

한국과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태국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비전을 담은 선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은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2011년 출범한 한·메콩 협력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최초로 정상급으로 격상된 협의체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상들 간 합의의 사항

을 담았다. 참가국 정상들은 공동 번영을 위한 한·메콩 우선협력 분야로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 안보 협력 등을 제시했다.

또 정상들은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해 문화·관광·인적자원개발·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맞아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를 통해 메콩 국가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 설립 등을 통해 양측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수자원 관리, 생물 다양성, 산림 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메콩지역을 건설해 나가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이와 함께 참가국 정상들은 연례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최고위급 대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했다.

청와대는 "한강의 기적'이 메콩 국가의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채택된 이번 선언은 정상급으로 격상된 한·메콩 협의체가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뉴스

## 靑 "김기현 '하명수사' 사실무근... 정상적 절차 따라 첩보 이관"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前) 울산시 장에 대한 비위 혐의의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

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선거 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전 시장 측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윤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뉴스

## 복지시설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 전북연구원, 지역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제안 복지시설 통합해 복합화·특성화·이용대상 다변화 지향

지역주민의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특성화를 통해 지역 복지 수요에 맞는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안이 나왔다.

27일 전북연구원은 전북도 사회복지 시설 지역화 방안이라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역 복지시설은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적절한 규모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지시설의 유형별로 기능의 복합화와 사업내용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복지정책과 세부 복지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2018년 말 기준 생활시설은 총 9148개소, 이용시설은 1

만270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시설도 약 179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전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인구 10만 명당 17.85개소로 전국 평균인 13.12개소보다 많고,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노인인구 천명당 15.44개소로 전국평균인 7.18개소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어 사회복지 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정책 동향이 생활시설은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소규모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이용시설의 경우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 추가로 확대해 필요할 경우 시설운영형태를 다각화하여 복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 복지시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북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로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수요가 높은 농촌지역은 현재 읍지역과 면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2단계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읍지역과 읍면경계지역, 마을지역 등으로 3단계로 전환해야 하고, 복지시설의 공급기반이 좋은 도시지역은 복지시설의 다기능 복합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하는 이용대상의 다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시설 간 조정과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 간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지사장 **신교준**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